

社說

광주형 일자리, 멋진 '대승적 결단'은 어디 갔나

국민적 기대 속에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파탄 위기에 놓였다. 한국노총 광주지역 본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비롯해 임금 노동자 2배 이내 책정, 현대차 추천 이사 사퇴,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협약 파기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은 "노동계에서 협약 파기 이유 내건 여러 요구 사항을 수용한다"며 동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노동계가 강조한 노동이사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노사협정서 내에 '회사의 주요 정보를 수시로 공개하고 사안에 따라서 노동계와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노동이사제를 가리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현대차는 노동이사제가 협정서에 없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계 인사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제도로 업계와 학계 등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업 초기에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큰 이견을 보였다. 여기에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임원 선임 등을 놓고 갈등을 거듭하며 노사 불신이 커졌다.

광주형 일자리는 균산, 밀양 등으로 퍼져나간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으며 적극 추진됐다. 사업규모별모터스는 정규직 1천여명을 고용할 계획이었다. 임금이 많지 않지만 주택과 의료 지원 등이 주어지 노동계가 일자리 창출이란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함께 했었다. 그런데 협약 파기로 일자리 창출은 '희망고문'으로 변했다.

애초 광주형 일자리가 시장 논리가 아닌 지자체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 우려가 있었지만 지자체와 기업, 노동계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대의를 품고 손을 맞잡으며 담담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노사갈등으로 노동계는 자동차 공장 착공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의 우려가 컸다. 이제는 협약 파기로 파탄 위기에 빠졌다. 한국노총은 광주시에 불신을 드러내며 정부 차원의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한국노총이 협상 당사자이지만 한국노총과 총선 선거대책기구를 꾸려 연대하고 있는 당정이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증가하는 지역 성착취범죄 뿌리 뽑아야 한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광주·전남 지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아동성착취 범죄가 170건이 넘었다고 한다. 아동성착취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하고 유포·소지하는 행위다. 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성착취 영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삭제나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무소속 정인화(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정별 아동성착취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 22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아동성착취 범죄는 총 178건이었으며 136명이 검거됐다. 광주는 100건이 발생해 75명이 검거됐고 전남은 78건이 발생, 61명이 붙잡혔다.

광주·전남지역 아동성착취 범죄 검거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광주의 경우 2016년 11건

(12명 검거), 2017년 24건(19명), 2018년 34건(20명), 2019년 30건(23명), 2020년 2월 22일 기준 1건(1명)의 아동성착취범죄가 발생했다. 전남은 2016년 3건(4명), 2017년 25건(18명), 2018년 23건(18명), 2019년 27건(20명)이었다.

아동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이 큰 만큼 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하고 유포·소지하는 행위뿐 아니라 영상 시청 접근에 대한 처벌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첨단기술 발달로 그 수법과 사례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고 더욱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범죄가 일시에 급속히 확산되는 특수성 때문에 당국의 신속성을 요한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설치, 운영에 들어간 광주·전남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외국 수사기관과 글로벌 IT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인터넷 및 SNS를 이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 발본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치적 거리두기

≡취재수첩≡



임채만 (정치부 부장대우)

자유로운 일상이 이토록 소중하고 그리웠던 적이 있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외 바이러스 감염 공포로 인해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 확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위생수칙 준수를 기본 이니거와 2m 거리두기, 밀집행사 자체 등 고강도 통제를 시행하면서 바이러스 전파 감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현상은 대구에서 하루에 수백 명이 나왔던 확진자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감염원 차단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국가에서 확진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국내 입국자로부터 지역사회 감염원 차단

이 방역당국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가 인류의 자유를 옥죄고 있지만 치료제, 백신 등 근본적인 바이러스 치료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반면 이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극도로 제약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바이러스 공포로 인해 불똥이 튀고 있는 현상은 총선 유세장이다. 바이러스 감염 공포로 인해 대면 접촉이 힘든 가운데 왕성한 선거 홍보가 불가능하다. 후보들은 본의 아니게 유권자들과 '정치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은 역대 최대 정책이 실종된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모름지기 정치는 민생을 편안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고 편을 가르는 선봉에서 있으니 '정치 혐오증'을 당연히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대처 과정에서도 정치권은 '네 탓' 공방하기에 바빴다. 누구나 해당할 수 있는 재난에서는 정치권은 단판대응에서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 책임 추궁에 앞서 사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국민들이 정치적 거리두기에 고착화하는 것을 정치권은 교훈삼아 희망을 주는 정치로 환골탈태하길 바란다.

전남의 미래가 걸린 방사광가속기 유치

의 첨단과학산업단지 건설해 21세기 풍요로운 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포부였다.

'미완의 약속' 호남균형발전 지켜야

구체적으로는 제2 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정부출연 및 대기업 연구소를 유치해 연구개발의 성과가 곧바로 산업화로 이전돼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테크노폴리스를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된 이 계획은 매우 혁신적이고 시의적절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시간이 흐르면서 속속을 거듭했고 급기야 광주과학기술원과 일부 정부출연연구소 분원만 계획대로 이행됐을 뿐 '미완의 약속'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처럼 첨단단지가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로 쓰그라든 데는 호남의 정치적 힘이 미약하고 타 지역의 견제에 휘말린 결과 때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균형발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각 시도에 혁신도시를 만들어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쇠퇴해가는 지방을 살리고 자 애를 썼다. 그 결과 지방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지방 젊은이들이 고향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1조원대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 구축 계획을 세우고 오는 5월 부지선정을 목표로 전국 사·도를 대상으로 공모 중이다.

방사광 가속기는 짧은 파장의 방사광 빛(X-ray)을 이용해 극미세 가공, 극미세 물체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연구장비로 이차전지, 신소재, 반도체 개발 등 에너지 산업분야는 물론 물리 화학 생명공학 등 기초과학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정지권 역량 결집 대응논리 절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분석에 따르면 방사광가속기가 지역에 유치되면 6조7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2조4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3만7천여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방사광가속기 유치는 전남도를 비롯 인천 송도와 충북 오창, 강원 춘천, 경북 포항 등 5개 지자체가 경쟁하고 있다. 전남도는 나주 혁신도시에 한전공대와 연계해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27일 과거부가 발표한 방사광가속기 부지 유치규모 평가기준에 대해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방사광가속기 구축에 따른 성능과 품질보다 시설 접근성과 인근 배후도시 정주여건 등 지리적

여건이 평가기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먼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설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또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배제이나 평가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가속기는 포항공대에 2기의 방사광가속기를 운영하고 있고, 경우에 양성자 가속기, 대전에 중이온가속기, 부산에 중입자 가속기 등이 구축 중이거나 운영되고 있다. 호남권은 방사광 가속기는 물론 여타 대형 첨단연구시설이 전무할 뿐 아니라 정부의 연구분야 예산지원도 미미한 수준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과학기술 수준이 지역 경쟁력이 되는 만큼 학계와 산업체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호남권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정치권의 역량 결집은 물론 전남도는 대응논리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전남의 미래가 걸린 4세대 원형방사광가속기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아울러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 5·18정신 계승과 균형발전을 국정철학으로 삼고 있는 문재인정부는 5·18 40주년 인을 올릴 영령들이 괴롭혀 염원했던 지역사회 해소를 위해 나주 혁신도시에 추진 중인 원형방사광가속기 구축에 특단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박준수의 淸談直筆

청담직필



5·18 40주년을 맞아 광주·전남의 현주소를 생각해본다.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을 이룬 80년 5·18은 군부 독재 타도뿐 아니라 지역차별과 소외에 대한 집단저항의 외침이었다. 그로부터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뀐 지금, 민주화는 이뤄졌지만 고착화된 지역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갈등요소로 잠재해 있다.

박정희가 철권통치의 기반으로 삼은 것은 불균형 성장전략으로써 농촌(호남)의 희생을 통한 경부축 산업화에 뿌리를 두었다. 그리고 총칼을 앞세워 5·18을 희생양 삼아 집권한 전두환 역시 불균형 성장전략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신군부 출신 노태우가 87년 12월 대선에서 호남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서해안시대'라는 호남개발 청사진을 내걸었다. 이는 '3김'과의 차별화를 이루고 5·18에 대한 속죄의 뜻이 담긴 공약이었다. 노태우는 집권 후 '서해안시대'의 가시적인 이행조치로 광주 첨단단지 구상을 발표했다. 광주 인근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1천만평 규모

의 60~70%가 감염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우리나라, 이탈리아 등이 정점을 찍고 확산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코로나19는 잊고 지냈던 국내의 금융시장의 오랜 역사적 기록들을 되살려냈다.

3월 16일 미국 다우지수는 하루에 12.93%(2,997.10포인트)가 하락하여 1987년 블랙먼데이 22.6% 이후 역대 두 번째의 폭락 기록을 재연했다. 이날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도 1993년 도입 이래 최고치 82.69를 기록하였다. 3월 19일 국내 코스피지수는 2009년 7월 24일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장중 1,500선이 붕괴(1,499.77)되었고, 광주전남 지역 3월 소비자심리지수(79.7)도 전월 대비 19.3포인트가 하락하여 낙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19.0포인트)보다 컸다.

이번 각국의 코로나19 사태의 진행과 대응을 지켜보면서 '감염병시

기고



박철우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장

대'에 새롭게 주목하게 된 가치와 과제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았다.

첫째, 정보 투명성의 가치다.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나 이통 통신에 대한 공개에서 보았듯이 투명한 정보 공유는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토대가 된다. 정보가 은폐되고 단절될수록 불안과 공포는 커지고 불신과 음모론만 확대재생산 된다.

둘째, 비대면 경제활동(contact economy)의 증가다. 코로나19의 확산 중에도 국내에 사재기가 많지 않았던 이유로 원활하게 작동한 택배 시스팀을 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오투오(O2O) 산업, 비대면 쌍방향 교육(강의), 재택근무·원격회의, 비접촉식 결제 등과 관련된 인프라 확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자 의료에 대한 지원 확대다. 코로나19 치사율이 높은 이탈리아 경우를 보면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23%로 일본 다음으로 높고 코로나19 사망자 90% 이상이 70세가 넘는 고령자라고 한다. 2019년

아브라카다브라!

기준 광주와 전남의 고령인구 비율이 각각 12.9%, 22.3%로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딱히 없는 지금의 우리 처지는 말라리아가 유행한 2세기 로마시대와 다를 바 없다. 로마황제 주치의였던 세레누스 사모니쿠스가 지은 '의사(Liber Medicinalis)'에 따르면 당시의 말라리아 처방은 바로 '아브라카다브라(ABRACADABRA)'라고 쓰여진 부적을 몸에 지니는 것이었다고 한다. "역병이 물러가라"쯤의 기원을 담은 이 주문의 효험을 황제 주치의도 인정했다고 하는데, 자주 되뇌어 보면 자심감과 긍정 마인드로 면역을 이 강화되면서 뜻하지 않은 효과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소식이 조만간 짹짹소문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의 60~70%가 감염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 우리나라, 이탈리아 등이 정점을 찍고 확산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코로나19는 잊고 지냈던 국내의 금융시장의 오랜 역사적 기록들을 되살려냈다.

3월 16일 미국 다우지수는 하루에 12.93%(2,997.10포인트)가 하락하여 1987년 블랙먼데이 22.6% 이후 역대 두 번째의 폭락 기록을 재연했다. 이날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도 1993년 도입 이래 최고치 82.69를 기록하였다. 3월 19일 국내 코스피지수는 2009년 7월 24일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장중 1,500선이 붕괴(1,499.77)되었고, 광주전남 지역 3월 소비자심리지수(79.7)도 전월 대비 19.3포인트가 하락하여 낙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19.0포인트)보다 컸다.

이번 각국의 코로나19 사태의 진행과 대응을 지켜보면서 '감염병시

기고



장세일

전남도의회 의원(영광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재단이 발생하면 사·도 경계나 관할 지역 구분 없이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관서가 먼저 출동하는 등 공동 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화재시 전국 소방차 872대, 소방인력 2천700여명이 투입되어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대구 경북 지역에 전국 119구급차가 동원되어 코로나19 환자 이송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국단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시험도 소방청장이 실시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축하하며

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통합 개편한다.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청장이 각 시도 본부에 지원 요청하는 형식에서 필요 시 소방청장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던 국가직화는 이뤄졌지만 인건비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지자체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3천억원 규모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방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3천500여명의 전남소방공무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이에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국가직 전환 국회 법안이 통과되었을때도 독도 행기 추락사고로, 이번에도 코로나19 사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아쉬운 마음이 들 뿐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국민들이 한층 더 질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3천500여명의 전남소방공무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 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논설실장 鄭鎮坦 편집국장 吳星洙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체육부 650-2065	광고국 650-2072	광국교 650-2016
경제부 650-2050	사진부 650-2080	경영지원국 650-2010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서울실 650-2006	기획사업국 650-2079	입무국 650-2019
문화부 650-2067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